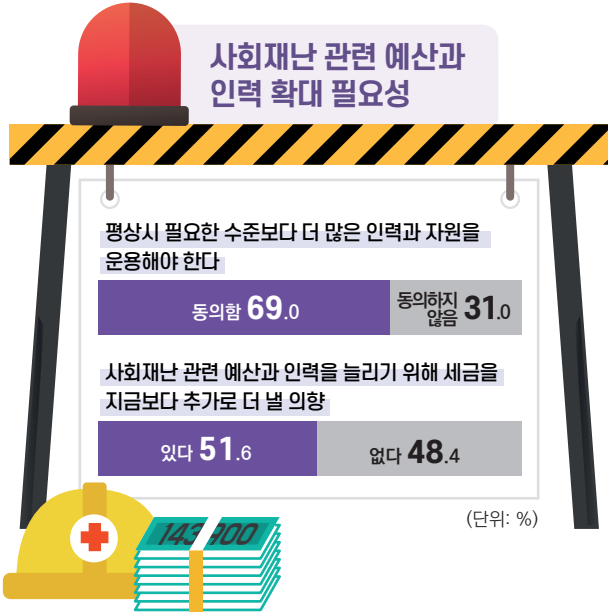


• 2022 •  
통권 14호

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
**DATA BRIEF**

##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

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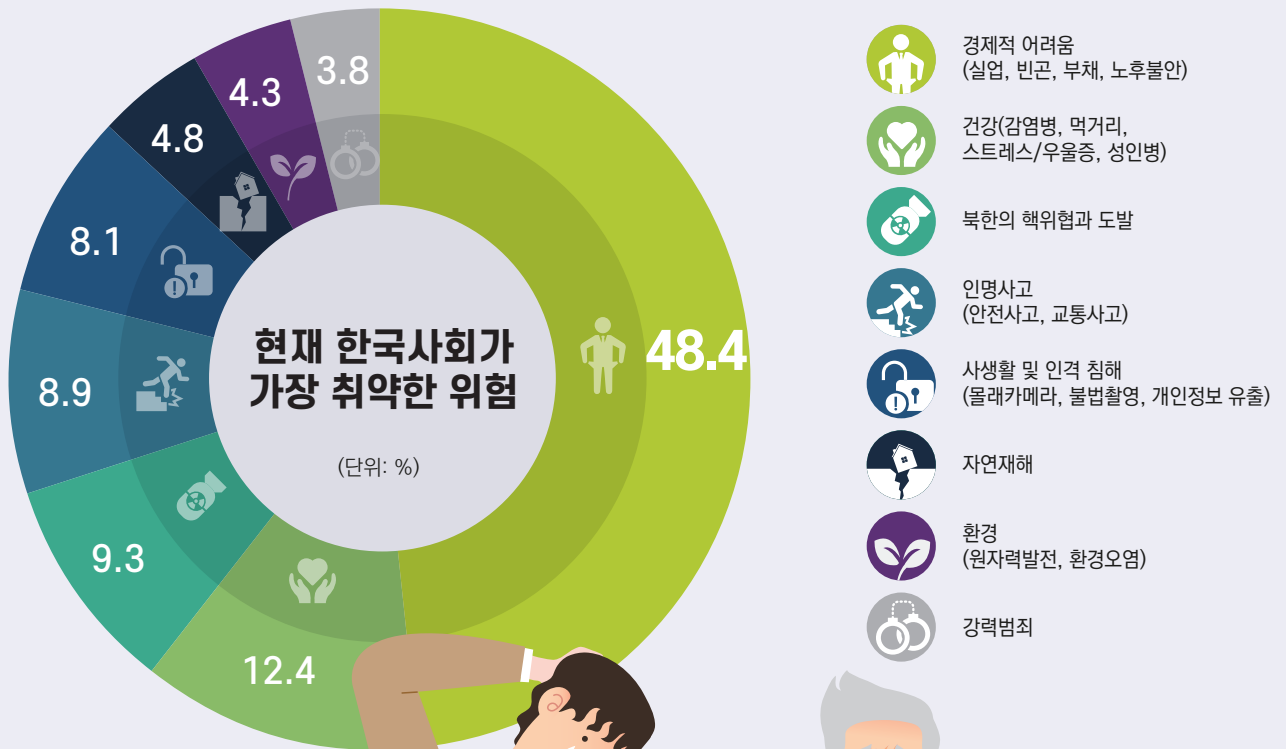
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, 69%가 동의하고 31%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1.6%가 있다, 48.4%가 없다고 응답하였다. 51.6%의 응답자들이 지금보다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은 연간 1인당 평균 143,9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.

# 1

##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(1순위)

- 경제적 어려움이 48.4%로 가장 많았고, 건강(12.4%),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(9.3%)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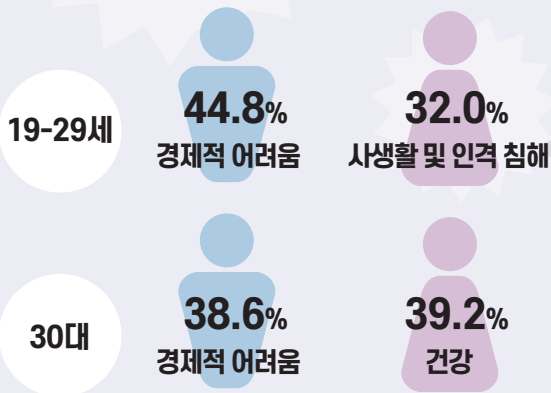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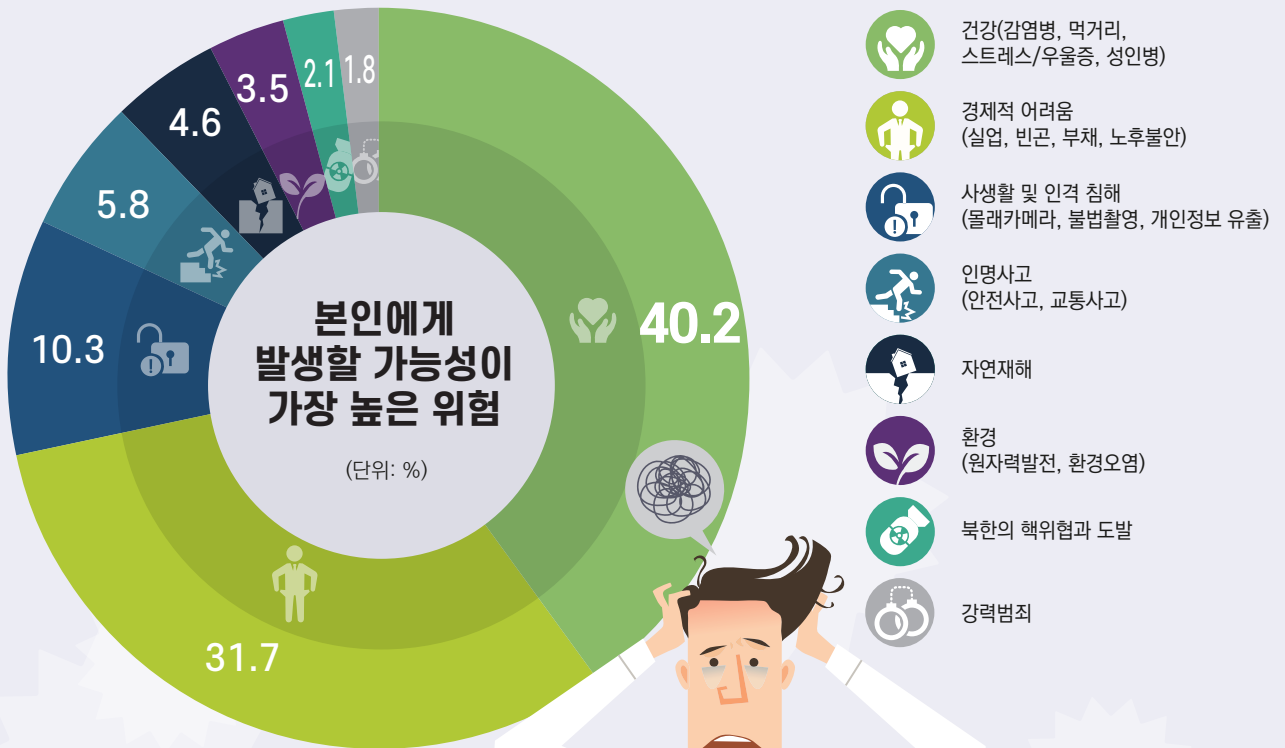
- 경제적 어려움 (실업, 빈곤, 부채, 노후불안)
- 건강(감염병, 먹거리, 스트레스/우울증, 성인병)
-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
- 인명사고 (안전사고, 교통사고)
- 사생활 및 인격 침해 (몰래카메라, 불법촬영, 개인정보 유출)
- 자연재해
- 환경 (원자력발전, 환경오염)
- 강력범죄



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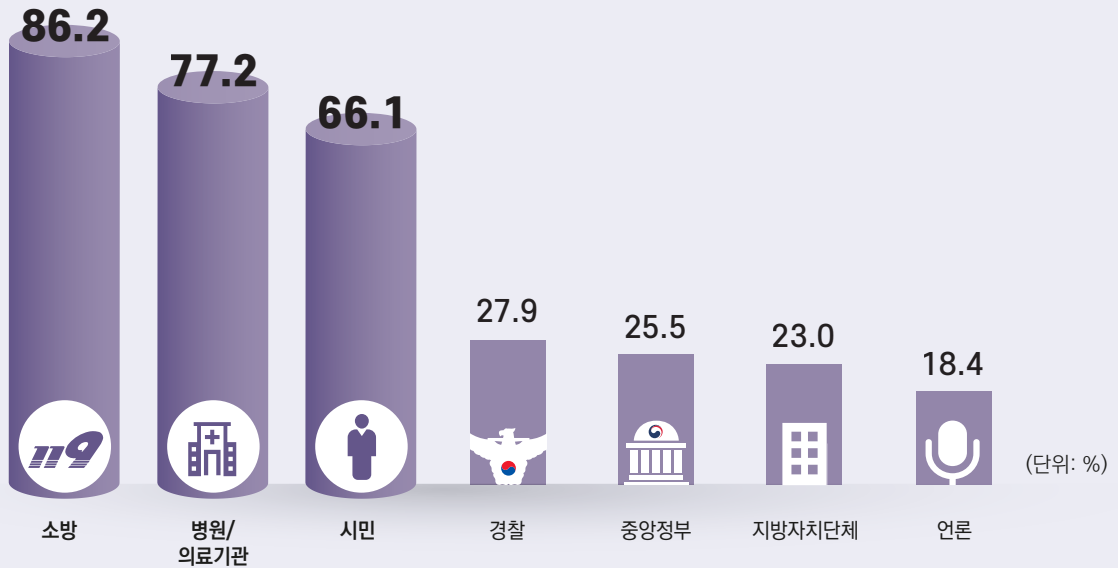
##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(1순위)

- 건강(40.2%), 경제적 어려움(31.7%), 사생활 및 인격 침해(10.3%) 등을 자신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인식
- 연령대별로 남녀 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, 19-29세 남성의 경우 “경제적 어려움”이 44.8%로 가장 많은 반면, 19-29세 여성의 경우 “사생활 및 인격 침해”가 32.0%로 가장 많았음
-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“경제적 어려움”이 38.6%로 가장 많은 반면,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“건강”이 39.2%로 가장 많았음



# 3 주체별 사회재난 대응의 효과성

- 소방, 병원/의료기관, 시민들의 대응은 효과적이었지만, 경찰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언론 등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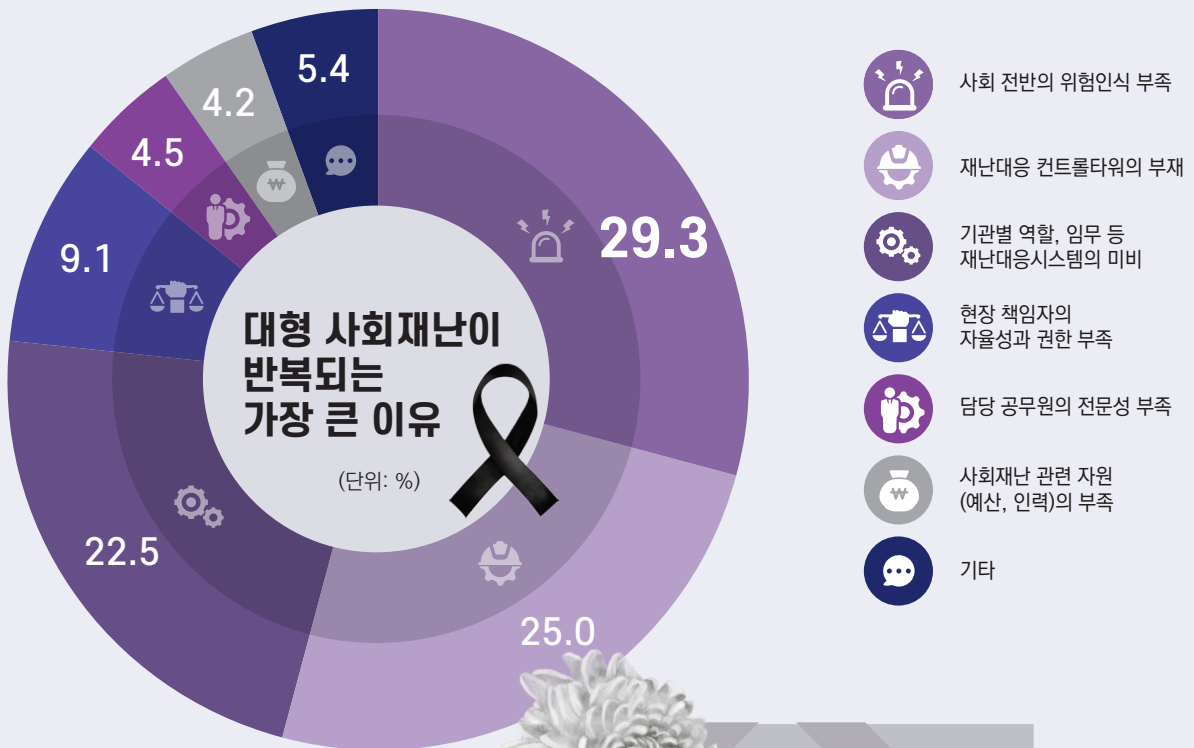


우리나라에서 화재/붕괴/폭발/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)/화생방사고/환경오염사고, 국가핵심기반 마비,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다음 각 주체들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# 4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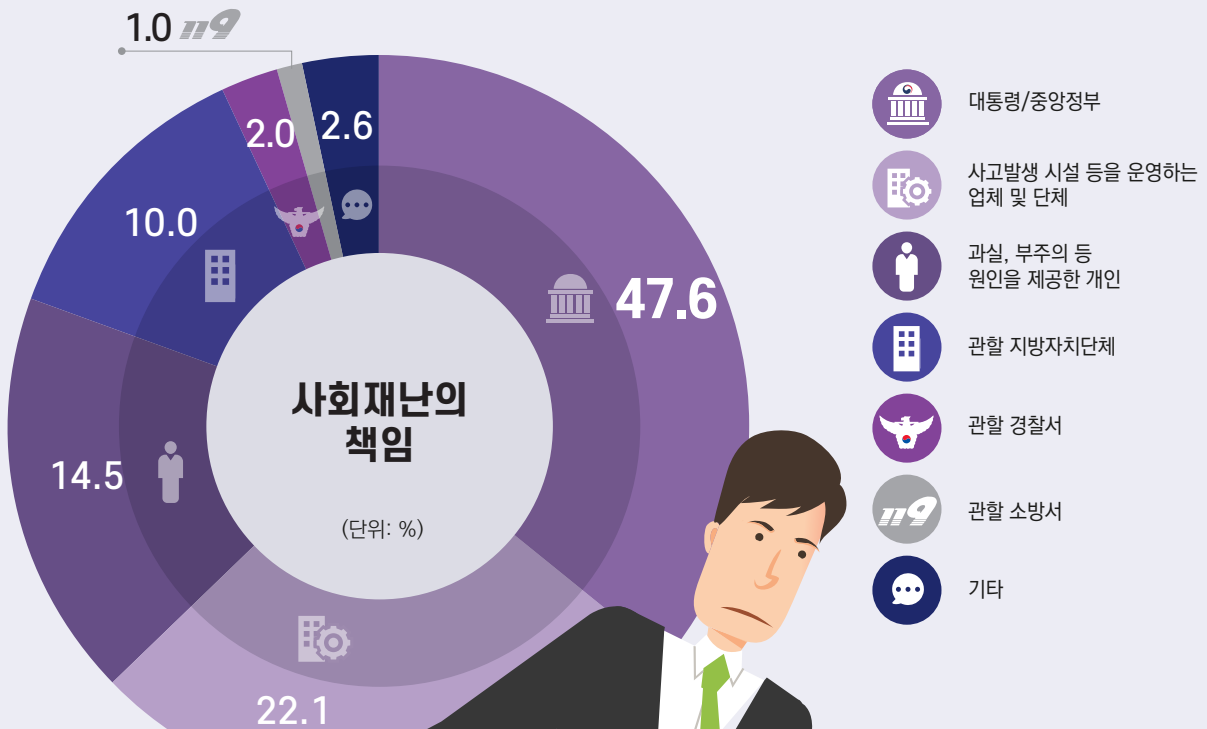
-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(29.3%),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(25.0%), 기관별 역할, 임무 등 재난대응 시스템의 미비(22.5%) 등을 주 원인으로 인식



우리나라에서 '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', '세월호 참사', '10.29 이태원 참사'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# 5 사회재난의 책임

- “대통령/중앙정부”라는 응답이 47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“사고발생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” (22.1%), “과실, 부주의 등 원인을 제공한 개인”(14.5%), “관할 지방자치단체”(10.0%) 순으로 많았음



귀하는 화재/붕괴/폭발/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)/화생방사고/환경오염사고, 국가핵심기반 마비,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,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01



###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

-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난, 북한 위협, 사회재난, 자연재해 등 '복합위험'에 직면
- 경제적 위험, 건강 위험, 사생활 및 인격 침해 등에 비해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는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
-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여유 있는 백업<sup>backup</sup> 자원을 확보해야 하나, 재난에 대한 낮은 관심은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
  - \* 이번 조사에서 예산 확충 지지율(69%)에 비해 추가 세금 부담 지지율(51.6%)이 상대적으로 낮음

02



### 재난관리는 예방부터 현장에서의 대응,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

-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의 재난관리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물리적 복구에 주력해 왔음
  - \* 미발생 재난의 사회적 비용(평온한 일상이 주는 사회적 편익)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움
-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
  - \* '세월호 참사', '10.29 이태원 참사' 등 복구과정에서 갈등증폭으로 거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

03



###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

- 윤석열 정부는 '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'을 120대 국정과제(65번)로 선정
-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에 대비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 매뉴얼 구축 및 관계기관들의 숙지가 필요
-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권한을 강화하고, 단체장의 재난관리 성과를 다음 지방선거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

**2022년 제5호(통권14호)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(DATA BRIEF)**는  
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.

자료: 「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」 한국행정연구원

- 조사 기간 | 2022년 12월 7일 ~ 12월 14일
- 조사 방법 | 온라인(모바일) 조사
- 모 집 단 | 전국 거주 만 19~69세 남녀
- 표본추출틀 | 한국갤럽 사회연구패널 (무선RDD를 활용하여 구축한 확률추출패널)
- 추출 방법 |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기준 비례할당
- 표본 크기 | 일반국민 1,000명
- 표본 오차 | 95% 신뢰수준  $\pm 2.9\%$ p
- 조사 기관 | 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

